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12. 3.(금) 08: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044-215-2770)	담당자	이상홍 사무관 lsh0622@korea.kr 김애리 사무관 arkim0814@korea.kr 신기태 사무관 shinkt89@korea.kr 박진숙 사무관 vision0504@korea.kr 김선익 사무관 ksi1206@korea.kr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천영평 (044-205-3902)		권오영 사무관 koy567@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김형식 (044-201-2231)		손경문 서기관 philoso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박덕열 (044-203-5250)		임미정 사무관 mjlim@korea.kr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전상훈 (044-200-4551)		박진석 사무관 sham23@korea.kr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이정현 (042-481-2530)		유달순 사무관 ohmydal@korea.kr

## 제목 :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3(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국조실,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통계청, 조달청 등 15개 부처 참석

- ① 11월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통계청, 제목만 공개)
- ②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③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 제목만 공개)
- ④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행안부, 제목만 공개)
- ⑤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현황 점검(산업부, 제목만 공개)
- ⑥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대응방안(공정위, 제목만 공개)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mailto:moefpr@korea.kr)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소비자물가 동향 (개최배경) 】**

어제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3.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대의 높은 물가상승세가  
2개월 연속 나타남에 따라  
총력대응 기조하에 범정부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15개 관련부처가 모두 참석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①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②재료비 인상요인 반영에 따른 외식물가·가공식품 가격  
상승, ③한파·병해 등에 따른 채소류 강세 등에 기인합니다.

먼저 석유류는 10월 유가 급등세가 약 2주간 시차를 두고  
11월 중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월대비 오름폭이 확대되었습니다(10월 27.3%→11월 35.5%).  
특히 11월 35.5% 상승은

‘08.7월(35.5%)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에 물가기여도도 1.3%p까지 높아졌습니다(10월 1.0%p).

11.12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지만  
상순·중순·하순 등 3번의 물가 조사 중 하순 1번만 반영되면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11월 물가안정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는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된  
외식물가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11월 물가기여도는 1.0%p를 기록하였습니다(10월 0.9%p).  
경기회복세 및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에 따라  
음식점 등 매출증가도 개인서비스 물가오름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축수산물물은 채소류·축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물가기여도가 10월 0.0%p에서 11월 0.6%p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11년 만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평년대비 기온이 7~8℃ 정도 떨어졌고,  
배추무름병, 오이·호박 바이러스 등 병해피해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하순~12월 상순이 통상 본격적인 김장철이지만  
올해는 이른 한파로 11월에 김장수요가 집중<sup>1)</sup>된 영향도 증첩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채소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 (10월) △17.4 → (11월) 9.3)

그리고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가공식품 등 기타 공업제품들  
오름폭도 확대되면서 물가기여도가 0.5%p를 차지하였습니다.

## 【 최근 물가동향 평가 및 전망 】

이번달 물가상승폭이 지난달에 비해 확대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발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고  
한파 등 기상요인이 증첩되면서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회복 등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1) 김장의향 관련 2차 소비자 조사(11.10~11일) 결과 1차 조사(10.7~12일) 대비 11월 상순  
중순 김장 비중이 각각 5.4%p, 3.7%p 증가하고, 12월 상순 김장 비중은 6.9%p 감소(농촌硏)

그간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공급측 요인 영향이 점차 축소되다  
이번달에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기여도 합이 1.9%p로  
지난달 1.0%p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11월 물가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곡물 가격 강세 등에 따른 원재료비 인상 부담이  
외식 및 가공식품 물가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 등에 따라 내수여건이 개선되면서  
개인서비스 중심으로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세는 글로벌 차원의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 주요국도 유가상승,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최근 물가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11월 유럽지역 물가상승률은  
독일은 6.0%, 스페인은 5.6%, 유로존은 4.9%(HICP<sup>2)</sup>기준) 등  
모두 '9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10월 소비자물가가 6.2% 상승하며  
31년내 최고수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생산자물가도 9월 10.7%에 이어 10월 13.5% 상승하며  
'96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2달 연속 경신하고 있어  
중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중 '21년 물가전망치 상향폭이  
G20국가 중 영국(0.1%p)에 이어 두 번째로 작고,  
'22년도 일본(0.3%p)과 함께 가장 낮은 상향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

2)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지수 측정방법을 따른 합성소비자물가지수로 유로존 내  
국가 간 물가수준 비교에 활용

12월 소비자물가는 유류세 인하효과 반영, 김장수요 조기 종료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차질,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 영향, 기상상황, 수요측 압력 등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 【 향후 대응방안 】

따라서 정부는 각별한 경제심을 갖고 물가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효과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간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방출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비철금속 할인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강하므로, 단기 가격과 수급 안정 노력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생산량 감소(전년비 △13.9%)로 가격 강세인 마늘은  
12월 중 신속한 수입을 추진하고,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배추·마늘 등 가격 강세 품목의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국회단체에서 590억원 반영하여  
‘22년에도 서민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구조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불안 발생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AI 및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농업관측 정확도와 예측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가격 조사(aT)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란 등 불합리한 가격결정구조가 존재하는 품목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겠습니다.  
12월말부터 제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하여  
경매를 통해 제란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유(原乳) 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경우  
원재료비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업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리고,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 규모도  
올해 506억원에서 내년도에 647억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3년까지 2년간 연장하겠습니다.

한편, 다른 품목·업체 인상에 편승하여 가격 인상이 확산되는 경우  
물가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는만큼,  
현장점검 및 업체소통을 강화하여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격인상 등 담합 의심정황 발견시  
공정위에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물가대응체제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종합적인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하여  
물가관계차관회의와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 【 마무리말씀 】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안정이야말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만큼 더욱 각별한 경제심을 가지고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과단성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각 소관분야 물가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물가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총집중하여 물가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